

한부모 가구주의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과 개선과제

초록

- ◎ 지금까지 일-생활 균형 제도는 대다수의 양부모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왔고, 일-생활 균형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임.
- ◎ 따라서 본 연구는 양부모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의 배열을 한부모 관점에서 재점검함으로써, 한부모 가구의 일-생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문헌 검토, 심층면접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심층면접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부모 가구주는 주어진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극심한 시간 빈곤을 경험하고 있음. 직장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노동시간 때문에 자신을 대신하여 자녀 돌봄을 수행해줄 다른 자원을 찾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임계치에 다다르면 일을 그만두어야 했음.
 - 둘째, 한부모 가구주 역시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지만 다른 양부모 가구주에 비해 자녀 돌봄과 양육에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기에 자신을 위한 투자는 뒤로 밀려났음.
 - 셋째, 자녀가 어릴수록 일자리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돌봄과 병행이 가능한지 여부였으나, 이러한 직장을 찾기는 어려웠고, 임시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 그동안 쌓아왔던 직업적 경력은 사라졌고 이전 직업적 지위로 돌아가기 어려워졌음.
 - 넷째, 공적 돌봄으로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가사도우미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해야 하지만 이러한 자원이 모든 한부모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님.
- ◎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취업한 한부모 및 미취업 한부모로 구분하여 정책 제언을 하였음.

● 한국의 일·생활 균형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일·생활 균형은 개인의 경력 관리와 생애 소득, 자녀의 기본적인 권리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OECD 31개 국가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시간의 보장 정도를 지수화하여 분석한 노혜진(2023)의 연구 결과, 한국은 그리스, 미국, 이탈리아와 함께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보장 정도가 모두 낮은 유형에 속하였음.

- ▶ 한국의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무엇보다도 과도하게 경쟁적인 분위기와 개인의 성취에 대해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지목할 수 있음. 또한 강고해지는 이중 노동시장 구조에서 2차 노동시장에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조건을 감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인 특성을 꼽을 수 있음.
- ▶ 취업자의 어려움과 달리 비취업자는 학습·훈련이나 돌봄 및 가사의 부담이 과중하고, 그 이외의 삶을 생활 여유가 부족함으로 인해 생활이 불균형적이라고 느끼고 있었음(변수정 외, 2022).

●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저출생 이슈로 개인의 삶의 질과 일·생활 균형이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얻고 있음.

-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첫 번째 정책과제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으로 설정되어 있어,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대한민국 정부, 2021).

● 하지만 정책적 관심은 일부 집단의 일·생활 균형에 한정되어있어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 ▶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생활 균형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혜택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진 안정적인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생활 균형의 개념을 확장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하였음. 일부 노동자만을 상정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며 돌봄 등의 의무를 병행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생활 균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 ▶ 광의의 일·생활 균형을 살펴본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격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광의의 일·생활 균형(돌봄 부담 및 건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절한 일자리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과 생활을 병행하는 것의 어려움)과 협의의 일·생활 균형(안정적으로 일하는 부모들의 근로시간과 그 외 시간의 적절한 분배)에 대해 살펴보았음.
- ▶ 일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가구가 속한 특수한 환경에 따라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은 상이함. 일·생활 균형이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 중 하나가 한부모 가구임. 한부모 가구의 경우 부모가 둘 다 있는 양부모 가구에 비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과 활용 가능한 자원이 부족함.

- ▶ 지금까지 일-생활 균형 제도는 대다수의 양부모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왔고, 일-생활 균형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임. 또한 취약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부 집단에 대한 세밀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였음.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와 관련 연구들은 빈곤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한계를 지니는데, 빈곤을 넘어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양부모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의 배열을 한부모 관점에서 재점검함으로써, 불균형적으로 유지되어 온 한부모 가구의 일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문헌 검토, 심층면접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음.

심층면접 결과

-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구주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한부모 가구주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생활 경험과 지원정책 경험을 파악하였음. 일-생활 균형 차원에서 한부모가족의 삶의 경험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이용 경험을 확인함으로써, 현장 적합도 및 수용도가 높은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 ▶ 심층면접은 개별면접과 집단면접(FGI) 두 가지 형식으로 진행하였음. 연구자와 면접 대상자가 1:1로 만나서 진행하는 개별면접은 한부모 가구주로서 경험하는 일과 생활의 다양한 맥락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집단면접의 경우, 한부모 관련 단체 관계자를 통해 관련 정책 이용 경험이 풍부한 대상자를 섭외하여 3개 집단으로 구성하였음.
- ▶ 심층면접의 질문은 크게 세 부분인 기본사항, 일-생활 경험, 정책 이용 경험으로 구성됨. 기본사항에는 면접 참여자와 동거가족의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정보, 소득, 한부모가구 특성 정보 등이 포함됨. 일-생활 경험은 사전질문지를 통해 안내된 시간일지에 평일과 주말 시간 사용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일과 생활의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로 구성함. 정책 이용 경험은 이용했던 정책 경험과 개선점, 이외 필요한 지원 등으로 구성함.

<표 1> 면접 진행방식 및 참여 인원수

(단위 %)

구분	면접 진행방식	참여자 수
개별면접	연구자와 참여자가 1:1로 진행	17명
집단면접	그룹 당 참여자 2-3명으로 총 3개 그룹 진행	7명

<표 2> 면접 질문내용

구분	내용
기본사항	- 본인 및 가구원의 기본정보(성별, 연령, 학력, 취업 여부) - 한부모가 된 사유, 기간, 면접교섭 여부 - 가구 소득 종류 및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수급 여부
일-생활 경험	- 일 및 주말 시간 사용 경험: 기상 후 자녀 등교/등원 준비, 근무시간, 저녁 준비시간, 취침까지의 일과 등의 시간일지 작성 및 함께한 사람 - 일-생활 균형 정도, 자녀돌봄과 노동조건 사이 변경 경험 - 일·가족 갈등 경험: 자녀 양육과 내 생활(커리어) 간의 충돌 경험, 생계 부양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 한부모로서 일-생활 균형이 가장 어려웠던 경험
정책 이용 경험	- 취업지원제도 이용 경험: 현재 및 과거의 취업(구직) 경험, 한부모로 인한 취업(구직)의 어려움 -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현재 및 과거의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경험 - 유연근무 및 휴가제도 이용 경험: 현재 및 과거의 유연근무 및 휴가제도 이용 경험, 한부모로 인한 제도 활용의 어려움 - 기존 제도의 개선점 및 한부모가구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지원

● 한부모 가구주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 일과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강도 높은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부모 가구주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음. 주어진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새벽에 출근하고 수면을 줄여 가며 일을 하는 등 극심한 시간 빈곤을 경험하고 있음. 직장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노동시간 때문에 자신을 대신하여 자녀 돌봄을 수행해줄 다른 자원을 찾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임계치에 다다르면 일을 그만두어야 했음.
- ▶ 한부모 가구주 역시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지만 다른 양부모 가구주에 비해 자녀 돌봄과 양육에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기에 자신을 위한 투자는 뒤로 밀려났음. 일을 하며 홀로 자녀 양육을 도맡아야 하는 상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취약한 조건으로 인식되므로, 직장에서 언제든지 대체되거나 쉽사리 밀려날 수 있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음.
- ▶ 자녀가 어릴수록 일자리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 돌봄과 병행이 가능한지임.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직장은 턱없이 부족하였고, 이 때문에 자녀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단발성의 임시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 그동안 쌓아왔던 직업적 경력은 사라졌고 이전 직업적 지위로 돌아가기 어려워졌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을 하는 한부모의 경우 자신의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운에서 찾았는데, 강도 높고 경직된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한부모는 개인의 노력이나 공적인 제도 보다는 주변의 관용과 배려라는 우연적 계기에 의존하여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었음. 한편, 코로나19로 공적 돌봄이 불안정해진 상황은 일을 하는 대다수의 한부모에게 위협 요소가 되었으나, 일부 한부모들에게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게 되어 기회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음.
- ▶ 한부모 가구주에게는 자녀 돌봄을 위한 공적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였고 이용의 어려움도 많았음. 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존재하지만, 명시된 운영과 실제 운영 사이에 간극이 있었고, 잘 운영된다 하더라도 자녀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 소득 기준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현행 돌봄 지원 제도는 일부 한부모들이 접근하기에 진입 장벽이 높았음.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한부모들은 정해진 기준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전셋집에 거주하기 때문에, 또는 차량을 소유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공적 돌봄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험을

하였음. 자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책 현장에서 ‘증명서가 없는 한부모’는 ‘돈 많은 한부모’로 취급되면서 소외되었음.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 돌봄이라는 사회적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안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현행 공적 돌봄 정책은 시급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음.

- ▶ 공적 돌봄으로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가사도우미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해야 하지만 이러한 자원이 모든 한부모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님. 어떤 경우에는 자녀 돌봄을 위해 노동 지위를 스스로 하향시키기도 하였음. 이는 어린 자녀의 돌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자녀 돌봄에 필요한 시간 대신 소득, 경력, 정규직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비정규직 상태의 품팔이 방식으로 노동 지위를 하향시키는 전략임. 온몸으로 자녀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삶을 살지만 자녀가 아플 때 가장 큰 고비를 경험하며, 자녀가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자녀에게 죄책감을 경험함.
- ▶ 한편, 많은 한부모들이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을 경험하였음. 이혼과 사별, 미혼모/부가 되었던 시기에 겪은 상실, 상처 등은 한부모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음. 또한 집안의 대소사를 홀로 결정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심리적 중압감 역시 한부모 가구주들의 공통된 경험이었음. 상의하고 책임을 분담할 사람이 없이 수많은 의사결정의 순간을 혼자 감당해야 했음. 선택으로 인한 책임은 혼자만의 몫이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운 마음을 경험하고 있었음. 이러한 부담과 책임으로 인해 한부모 가구주들은 소진을 자주 경험하였음. 자녀를 양육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과 에너지는 단순히 전 배우자 몫까지 해서 2배가 아니며, 체감상 몇 배 이상이기도 했음.

정책제언

● 모든 한부모 가구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 공적 돌봄서비스 강화

- ▶ 한부모의 일-생활 균형 도모를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돌봄서비스가 필요함. 한부모의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은 위급 상황 대응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적 자원 등이 부족한 한부모들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초등돌봄, 키움센터 등 공적 돌봄 시스템의 양과 질이 담보되어야 함.
- ▶ 미취학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적 돌봄 시스템은 어린이집임. 심층면접 결과, 일부 한부모들은 저녁 이후의 시간까지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 본인의 근로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음. 하지만 모든 한부모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음. 집 근처의 어린이집이 연장 보육을 운영하는지의 여부는 한부모의 노동 기회와 직결된 이슈이므로 전국 어디에서나 연장 보육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음.
- ▶ 초등 고학년 시기부터 부모의 특성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어 초등 이후까지 연계될 수 있는 공적 돌봄·교육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돌봄서비스 우선순위 부여 체계 구성

- ▶ 심층면접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공적 돌봄서비스의 우선순위 부여 체계임. 한부모가 자립을 위해 일을 하면 그나마 제공받던 공적 서비스의 기회가 박탈됨. 저소득 한부모에게만 돌봄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아닌, 모든 한부모에게 돌봄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 소득 및 가구 유형 요건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돌봄 지원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함.

● 모든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

- ▶ 한부모 가구의 일-생활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인 장시간 노동 및 시간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근무 여건 개선이 요구됨. 이때 일-생활 균형 개념은 주류층에 머무는 것이 아닌, 모든 직종과 지위를 포괄하는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동 지원 서비스 도입

- ▶ 원활한 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동 지원 서비스의 도입 역시 고려되어야 함. 각 돌봄서비스의 사이마다 발생하는 빈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공적 서비스도 보완될 필요가 있음. 예컨대, A 기관에서 B 기관으로 이동할 때 부모가 픽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부모 가구주는 분절된 시간의 일자리에서만 기회를 탐색해야 함. 따라서 각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부모의 시간 압박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이동 지원 서비스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내 인적 네트워크 및 지지체계 활성화

- ▶ 자녀가 아프거나 갑작스럽게 연장 근무를 해야 하는 등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하였을 때, 공적 돌봄 체계는 유용성이 매우 떨어짐. 가족센터 혹은 주민센터 등 한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달체계에서 거주지와 근거리에 있는 (가칭)헬퍼를 한부모 가구와 1:1로 매칭하여 긴급 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요구됨.

● 일하는 한부모 가구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 일-생활 균형 제도 활성화

- ▶ 최근 한부모 육아휴직 특례를 통해 한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시도가 있었음. 하지만 한부모 가구주는 법적으로 두 명의 성인이 보장받는 휴직 기간 및 휴직 급여를 1명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용한 상황임. 아동을 기준으로 최소 2명의 성인이 돌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급여액 뿐만 아니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도 두 배로 제공되어야 함. 이 때 2명의 성인은 한부모 가구주가 모두 사용하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아동을 돌보고 있는 친척 및 지인 등에게도 급여의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여, 가족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법·제도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가사지원 서비스 강화

- ▶ 자녀와의 질 좋은 시간(quality time)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사시간과 같은 그 이외의 시간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함. 즉, 한부모 가구주가 가사 활동을 하는데 보내는 시간을 단축하여 그만큼 자녀와 대화, 신체활동 등 질 높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 지원제도 도입을 고민해야 함.

● 지역사회 급식 제공 모델 개발

- ▶ 한부모 자녀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 연계 석식 제공 프로그램 도입이 고려되어야 함. 미취학 시기에는 어린이집 연장 보육을 받게 되면 저녁까지 균형 잡힌 식단을 먹일 수 있었으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더 이상 석식을 제공받을 수 없어, 간편식으로 때우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음. 높은 근무 강도를 견뎌내며 겨우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한부모 가구주에게 저녁거리를 준비할 여유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음. 취학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내에서 영양 있는 석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한부모의 저녁 시간을 벌여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미취업 한부모 가구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 한부모의 일-생활 균형 도모를 위해서는 취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함.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돌봄 부담 등으로 인해 취업 및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 대다수였음. 심층면접 결과, 복지 수급 경계에 있는 한부모들의 자립을 저해하는 요소는 적절한 일자리의 부족과 더불어 수급자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음. 따라서 수급자에 머무르고 있는 한부모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광의의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취업 지원이 요 구됨. 예컨대, 한부모의 진로 및 직업훈련 의향 등을 개별적으로 상담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연계하는 것과 더불어 돌봄의 부담을 함께 고려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현재 해당 서비스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돌봄의 사유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고 한부모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 개선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직업훈련 프로그램, 고용 연계 프로그램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 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과정 중에 돌봄 관련 위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주는 특례 등을 도입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자녀의 질병 등 가족돌봄휴가나 자녀의 학교 행사 참여 등 외출을 인정해주는 예외 규정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 양질의 단기간 일자리 확대

- ▶ 한부모의 생활 패턴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 특유의 고강도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한부모에게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과업이었음. 그렇다고 하여 한부모가 비취업 상태로 머무는 것은 한부모 가구의 생애 빈곤 및 빈곤의 대물림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초등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단시간 근무하면서 위급 시 조율이 가능한 일자리임.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일자리는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현재 국민취업제도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듯, 한부모에게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해야 함. 이때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등 제 3섹터에서 한부모에게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 한편 한부모에게 특화된 일자리는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배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도기적인 일자리로서의 역할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돌봄의 부담이 완화되는 시기에는 보호된 일자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1차 노동시장으로의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중장기적 지원도 요구됨.

참고자료

노혜진(2023).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 보건사회연구, 43(2), 192- 214.

대한민국 정부(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변수정·오신휘·조성호·김은정·이혜정(202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